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2월15일(월)
통권1호(제1권 제20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국제공조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타개가 목적

6자회담이 결렬됐다.

우리는 이번 6자회담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제공조를 대하는 남한정부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6자회담은 개최 전부터 전망이 불투명했다. 지난 10월초 열렸던 평양회담에서 북미가 구두로 합의한 바는 ‘시료 채취’의 명시가 아닌 ‘국제적 기준’이란 모호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과 일본 정부는 북미간의 구두합의가 아닌 6자회담을 통한 검증의정서 채택과 ‘시료 채취’ 명문화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북한과 미국을 압박했다. 이에 북한이 평양회담과 뒤이은 워싱턴 협의에서도 북미간에 ‘시료 채취’를 합의한 바가 없음을 천명하면서부터 사실 이번 6자회담은 원활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우선 남한의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남한의 역할은 『조선신보』가 12월 10자로 보도한 기사에 잘 나와 있다.

그동안 남한의 역할은 기사의 표현대로 ‘중재자’였다. 6자회담에서 북미간 이견이 있을 때, 북한에게는 같은 민족으로, 미국에게는 동맹국으로 구축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의사소통과 견해 일치를 조성하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기사는 이 당시 “남조선의 수석대표가 회담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과시”했음을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남한의 역할은 판이하게 달랐다. 북미간 합의사항까지 몰아붙이며 대북 압박의 틀을 만들고, 압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김숙 수석대표는 아예 시료 채취와 중유 지원 등 경제 보상을 연계한다고 하여 10.3 합의를 무력화시키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런 남한의 태도를 기사는 ‘훼방꾼’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였다.

결국 이번 6자회담의 결렬은 남한이 북미 사이의 중재자가 아닌, 지금처럼 대북 압박의 첨병으로 나선다면 국제공조의 목표 달성은커녕 남북관계의 재개마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른바 국제공조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6자회담은 임기내 2단계만이라도 마무리하고 싶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의지가 주요 동력이었다. 지난 평양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반발이 뻔한 ‘시료 채취’ 명문화보다 ‘국제적 기준’이란 양보안을 수용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임기말로 모멘텀이 취약한 상태에서 최대 이익보다는 차기 행정부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는 선에서 2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남한과 일본은 2단계 마무리가 불가능해질 것이 확실한 ‘시료 채취’를 주장함으로써 6자회담마저 결렬시켰다. 오죽하면 ‘남한과 일본 때문에 회담 진전이 어렵다’는 미국 외교관의 불평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였을까?

하지만 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동맹국으로서 남한의 주장에 귀는 기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익을 우선에 둘 것이다. 임기초라서 모멘텀도 충분하다. 미국 국익에 끝내 남한의 요구가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국 이익을 위해 남한을 배척할 수 있다.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에서 일본의 입장을 배척했던 사례나 클린턴 정부 시절 남한의 김영삼 정부를 무시했던 사례도 있다.

더욱이 새로운 민주당 정부는 일본보다 중국을 동북아정책의 주된 파트너로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렇다면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중점에 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더욱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동미봉남은 북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남한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이 야기한 결과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 남한 정부가 보인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의 네오콘식 국제공조의 추구는 남북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한·미·일 사이의 불협화음은 물론 중·러의 동의와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더욱 낮출 뿐이다. 진정 핵문제의 해결과 상생·공영의 한반도를 원한다면 현 정부는 국제공조에 대한 관점과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20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더니 2

이주의 주요 기사

“6자회담 핵심 의제는 경제보상 완결” [조선일보] 3

[RFA] “北, 보험소송 승소...5천100만 달러 받게 돼” 4

北대변 조선신보 “南 중재자 모습 사라져” 5

‘시료채취’ 걸림돌 6자회담 사실상 결렬 6

“北류경호텔에 중동자본 이어 홍콩기업도 투자”<RFA>..... 7

결국 미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북핵회담 8

美 경제난에도 대북지원은 전략적 차원서 지속 9

美, 북 ‘핵무기 국가’ 표기...동북아 안보 재편되나 10

Orascom to Invest in North Korean Phone Venture 11

北朝鮮への重油支援、露は完遂の方針 11

추천논문 / 유라시아시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한국국방연구원 제30회 국방포럼

▶주제 : 북한 핵개발의 실제적 위협 진단 및 우리의 대응

▶일시 : 2008년 12월 16일(화) 07:30

▶장소 :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김대중평화센터 한반도 평화 대강연회

▶주제 : 한반도 평화

▶일시 : 2008년 12월 16일(화) 17:00

▶장소 :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 토론회

▶주제 : 평화통일시민단체에서 바라본 대선 1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말한다

▶일시 : 2008년 12월 17(수) 10: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사)남북물류포럼 2008 송년회 및 특별강연

▶주제 : 2008년 남북관계 회고와 2009년 전망

▶일시 : 2008년 12월 19(금) 18: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벨라지오

이 주의 칼럼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더니

김근식(경남대 교수·정치학)

남북당국간에는 과거에도 관계 중단 사례가 있었다.

남북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문을 닫은 건 북한이라며 억울해 한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북이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간 행보를 보면 객관적으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정당임을 인정하지만 실제 북을 대하는 언행은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기 전엔 남북 협력을 포기해도 좋다는 고집이 강하다. 머리로는 교류협력을 인정하지만 마음과 정서로는 관계중단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항변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북에 대해 공식적인 회담 제의를 했다는 소식을 필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정식 회담이 성사되길 원한다면 이미 구성되어 있고 차기 회담까지 합의해 놓은 총리 회담과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및 각급 실무 회담의 틀을 통해 일자를 잡아 만날 것을 약속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 이후 가동되었던 남북 회담의 틀을 인정하지도 활용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매번 비핵개방 3000을 강조하면서 밝힌 원칙론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북에 대한 공식회담 제의가 결코 아니었다.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이 먼저 지원요청을 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북이 군사회담 제의를 해오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빠른 중단 요구에 시달리고 오는 게 공식 회담의 전부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명확한 메시지와 일관된 시그널을 북에 주지 못했다. 10·4 선언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합의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모집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 경제적 부담이 10·4 선언 이행의 문제점으로 매번 주장되지만 큰 비용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합의마저도 이명박 정부는 할 생각도 용의도 없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형식적 원칙론은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설을 집단행동 운운하며 반대하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는 8·15 경축사는 곧 이은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분열 시도를 경계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묻히고 말았다.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합의의 이행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정부는 아세안지역포럼 의장성명에서 10·4 선언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북 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한 북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이라곤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것과 자유민주주의 아래 통일 원칙을 밝힌 게 전부였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겉으로는 대화 용의를 밝히지만 실제 속으로는 반복 대결과 대북 고립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남북 관계 중단을 실행에 옮긴 것은 북한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교류협력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제 솔직할 때가 되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6846.htm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식량 83만여t 부족”

-- 12월 9일 중앙일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421만t으로 곡물 수입분 50만t을 감안해도 내년 10월까지 83만6000t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8일 밝혔다. 두 국제기구는 이날, 지난 9월 북한에서 진행된 식량 생산량 실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곡물 생산 부족으로 내년 10월까지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870여만 명에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AO 측은 “올해 날씨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료와 연료 부족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은 향후 심각한 식량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중국기업도 나가라”

-- 12월 9일 동아일보

북한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본국으로 철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기업가 등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해 10월경 중국인 기업가들에게 “11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철수 대상자가 전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주인력의 90%에게 철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인들은 북한의 이런 요구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 소식에 밝은 관계자들은 전했다. 북한 역시 아직까지 중국 기업인들의 강제추방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의 중국 기업은 모두 250여 개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나진선봉 지역에서 중국산 제품을 10월부터 팔지 못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및 나진선봉 특구 내 상주인력 축소에 대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개방지역을 닫고 있다는 분석과 개성 대신 나진선봉 지역을 제조업 중심으로 다시 개발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北 민경련 총회사 설립, 신규 대남 업무 전담

-- 12월 9일 노컷뉴스

북한이 민경련 산하에 민경련 총회사를 설립해 대남 신규사업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8일 그동안 대남업무를 취급하면서 비리에 연루된 민경련 단둥 대표와 북경대표는 물러나고 민경련 산하에 민경련 총회사(이용호 총사장)를 설립해 대남 신규사업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와 함께 단둥과 베이징, 연변의 민경련 사무소는 축소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며 개성 남북경협사무소도 상당기간 폐쇄, 축소 할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민경련의 대남 경협창구 독점역할로 인한 북한 내부의 갈등을 의식해 대남 경협창구 다양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포럼이 밝혔다.

민경련이 북한의 대남 독점 경협창구 역할을 해하면서 외화벌이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방북 초청이나 사업합의를 미끼로 방북료나 뒷돈을 챙겨오다 북한당국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6자회담 핵심 의제는 경제보상 완결” [조선신보]

-- 12월 9일 연합뉴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핵심의제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을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6자 단장회담, 2단계 마무리를 위한 협상’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의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합”이라며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의제는 5자의 경제보상 완결”이라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의 쟁점인 시료채취와 관련, “일본 등이 떠들고 있는 시료채취의 문서화는 10.3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지난 10월 미국 행정부가 취한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조치를 거론하면서 “현 단계에서 미완의 행동조치는 무력화(불능화)와 경제보상”이라며 “5자의 경제보상이 늦어지는 데 대응하여 현재 조선은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을 꺼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자 합의에는 중유 100만t에 상응한 경제보상이 명기됐는데 조선 측에는 아직도 45만t에 해당되는 물자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6자 협상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합의이행 지연의 책임을 조선 측에 들쭉우는 시료채취 요구는 경제보상의무를 태공하거나 6자회담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검증·지원 연계에 韓·日동의..나머지는 이견” <RFA>

-- 12월 9일 연합뉴스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한 것과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

송(RFA)은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이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해 주목된다.

RFA는 9일 “한국과 일본 등은 검증의정서에 관한 합의없이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고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검증문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자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뤄진 북미간 검증협상에서 북한이 ‘시료채취’라는 말 자체에는 동의한 적이 없지만 이 말을 포괄하는 ‘과학적 절차’라는 용어에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RFA는 보도했다.

지난달 하순 제주도에서 열린 군비축소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는 “시료채취를 부인한 북한의 공식 발표를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며 “시료채취에 관해선 분명 미북간 비공식적인 양해가 있으며, 북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해 김 특사에게서 직접 이 말을 들은 미국측 인사가 8일 RFA에 밝혔다.

금강산 사태 5개월 ... 현대아산 ‘존폐 기로’

-- 12월 10일 조선일보

오는 11일 금강산 관광 중단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현대아산이 존폐 기로에 섰다.

10일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재택 근무 등을 통해 비상 경영을 실시해왔으나 지난달 28일부터 개성 관광마저 끊기면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처지까지 몰렸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중단 사태가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비상 경영 계획을 짜놓았는데, 갈수록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도 경영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산에는 북측이 남측 체류 인원을 대폭 줄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현대아산 필수인력은 기존 25명에서 22명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들 인력만으로 현지 숙박 시설 등을 관리 감독하는데는 어려움이 크다. 더구나 금강산 입출경 시간이 일주일에 한 차례씩으로 제한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적시에 반입하기 어려운 상태다.

개성 관광 중단으로 남아도는 인력 활용 문제도 고민거리다.

북측의 개성관광 중단 통보로 현대아산은 관광조장 24명 등 관련 인력을 철수시켰으며, 개성 공단에 나가 있던 직원 50여명도 본사로 돌아와 현지에는 40명만 남아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현지 인력을 포함해 고성사무소 인원 일부를 개성 관광에 배치하면서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했으나, 개성마저 막힘에 따라 이들 인력 또한 대거 재택근무로 돌려야 할 상황이다.

현대아산은 이미 본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열흘씩 재택근무를 해왔는데 이같은 대북관광 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결국 현대아산은 지난 4일 통일부에 남북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으로 매출은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인 2천여억원에 그친데다 피해액이 865억원에 달하고, 협력업체에서도 21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현대아산의 설명이다.

물론 현대아산은 매출을 양분하는 대북관광과 건설 부문 가운데 대북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업의 한축이 무너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RFA] “北, 보험소송 승소...5천100만 달러 받게 돼”

-- 12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이 유럽의 재보험사들과 법정 공방에서 이겨 알리안츠 등으로부터 4천만 유로(미화 5천1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KNIC)를 대리하는 영국의 법률회사 엘본 미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특히 유럽 재보험사측은 북한측의 보험금 요구가 사기라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도 재보험사와 북한측간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05년 7월 고려항공 소속의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해 창고 건물과 건물안의 구호물자가 다 불타버리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유럽 재보험사측에 청구했으나 재보험사측은 북한측이 사고 발생 열흘도 안돼 수십만가지의 피해 품목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보상금을 요구한 것은 신빙성이 없는 사기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진행돼 왔다.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가 받는 보험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북측이 요구한 보험금 4천500만 유로(6천600만 달러)의 95%에 해당한다.

북핵 ‘시료채취’ 사실상 합의

-- 12월 10일 서울경제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검증의정서 초안과 관련, ‘핵 시료채취

(sampling)' 용어 대신 이를 의미하는 표현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이틀째 회의 일정을 마친 뒤 숙소인 차이나월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서 초안에 과학적 절차와 시료채취 등 미국의 요구가 반영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해도 무방하다(It's fair to say yes)"라고 답했다.

회담 소식통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시료채취와 관련된 의정서 초안의 내용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참가국 모두 크게 쟁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료채취는)문구 자체보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는 사항"이라면서 "문제는 다른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의정서 초안에는 검증방법과 관련, '과학적 절차를 포함한 국제적 검증기준을 적용한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이 제시한 검증의정서 초안은 4쪽 분량으로 별도 문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검증의 주체와 대상 등 다른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과정에서 수행할 역할 규정과 검증 대상 가운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 역시 "우리는 중국의 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증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검증절차는 모호성 없이 명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 대상의 경우 북한은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에 따라 영변 핵시설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등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신고시설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미신고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유력하다.

‘춧불 켜는 밤’ 계속되는 북한...정전 찾아져

-- 12월 10일 노컷뉴스

겨울철에 들면서 북한의 전력사정이 악화되면서 평양에서도 낮에 잦은 정전으로 공사현장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10일 평양시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겨울철에 들어 수력발전이 줄어들고 전력 수요가 늘면서 평양 시내 변두리 지역은 낮에도 3~4시간 정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밤에는 평양시 중심 지역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의 경우 밤 11시가 넘으면 정전이 잦아 여름철보다 아파트와 거리가 훨씬 어두워졌으며, 낮에 잦은 정전으로 공장과

공공장 등지에는 발전기를 가동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시내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경유는 주유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가격은 리터 당 1700원으로 한국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라고 설명했다.

평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유경호텔(105층)은 지난 3월부터 알루미늄 유리창 문틀공사에 들어가 올 여름부터는 유리창 부착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남쪽 부분에는 20층 가까이 유리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유경호텔의 유리창문을 부착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면 전체 공정은 50~55%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北대변 조선신보 “南 중재자 모습 사라져”

-- 12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과거 6자회담 때와 비교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간 “‘중재자’의 옛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노선이 다국간 외교의 전략까지도 대폭 전환시킨 듯 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10일 ‘6자 단장회담, 허물어진 북남공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검증의정서와 경제지원간 연계를 천명한 것을 가리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입장에서선 “일본과 한패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과거의 6자회담에서 남조선 외교관들은 ‘중재자’를 자부”했다며 “북측 외교관들과 동족의 입장에서 흥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동맹국’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 북과 미국의 의사소통과 견해일치를 보장하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자세”였으나 “지금의 조미(북미)가 무슨 합의를 이룩하면 여기에 이의를 내대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동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美 매코맥 대변인, “北 언제든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

-- 12월 10일 뉴시스

미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핵검증의정서에 시료 채취를 명문화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핵검증 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언제든지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시료 채취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두고 봐야 한다”

면서 “정확한 사안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돌아온 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킨 맥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당초 베이징 시간으로 11일 오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고 그가 중국에 남아 핵 검증의정서와 관련, 생산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할 경우 중국에 남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매킨 맥 대변인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테러지원국 지정박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은 많이 있다”면서 “현재도 북한에 대해 많은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과 나머지 세계 교역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며 미국과의 교역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가 비핵화될 때 비로소 북한은 나머지 세계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될 것이며 경제적 기회를 포함, 북한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킨 맥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시료채취’ 걸림돌 6자회담 사실상 결렬

-- 12월 11일 노컷뉴스

6자회담이 북한 핵 불능화에 대한 검증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10일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사흘째 회의에서 북한과 한미일 3국은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의견 조정에 실패했다.

6개국 대표들은 오후 4시 20분부터 7시까지 세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 초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고 내일(12일) 일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견 해소는 물론 추가 일정 조차도 결론 내지 못함에 따라 6자회담은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시료채취 등 과학적 절차를 명확하게 놓아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했지만 북한은 수용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은 검증의정서 타결을 위해 우리가 희망하는 내용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7월 합의대로 시설방문과 서류검

토, 기술진 면담 등 세 가지만 해도 과학적 절차라고 주장을 했고, 현단계에서 추가적인 과학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을 까발리려는 것으로 주권 차원에서 또 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북한 측 주장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해 “힐 차관보도 소상하고 상세하게 북한이 희망한 대로 평양과 싱가포르 제네바에 가서 양자협의를 했던 내용을 6자가 있는 곳에서 모두 다 설명했다”면서 평양 합의 내용에 대해서 힐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다.

北, 오바마정부와 새 협상 대비하나

-- 12월 11일 동아일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참가국들은 회담 사흘째인 10일 북한의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를 놓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1일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타결 가능성은 밝지 않다.

▽합의 도출 실패, 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며 “북한은 검증과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safe guard)’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검증의정서에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북한의 NPT 복귀 문제를 꼬집어낸 근거는 ‘9·19공동성명’. 9·19공동성명은 ‘북한은…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문구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단행 이후 만들어진 ‘2·13합의’와 ‘10·3합의’에는 적시돼 있지 않다. 1990년대 초반 ‘제1차 북핵위기’ 때 IAEA의 특별사찰 문제로 마찰을 빚다 NPT를 탈퇴한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임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미국 한국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IAEA가 북핵 검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합의문은 IAEA의 역할에 대해 ‘지원과 자문을 환영한다’고만 한정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도 사흘 내내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며 “북한은 IAEA의 검증도 수용하기 어렵지만, 비핵보유국을 대상으로 하는 NPT 가입도 더욱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시료채취 문제도 한때 접점을 찾는다

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한국 미국 등은 검증방법과 관련해 시료채취를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주권 침해” 등을 거론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집트 이통사, 北 휴대전화서비스 15일 개통

-- 12월 11일 연합뉴스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이 오는 15일부터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동지역 최대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은 지난 1월 31일 북한의 휴대전화 운영권을 획득한 이후 설비투자를 해왔으며, 지난 5월에는 시험통화에 성공했다.

오라스콤은 앞으로 3년간 북한에 4억 달러를 투자해 평양을 비롯한 3대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집트 증권사인 벨톤의 트레이더 테이무르 엘 데리니는 “북한 내 휴대전화 이용자는 정부 관료들로 한정되겠지만 그 숫자가 상당하다”며 “북한은 신흥 미개척 시장”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당 연평균 12~15달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지난 2일 오라스콤 대변인의 말을 인용, “휴대전화 개통 초기에는 평양에서 15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北류경호텔에 중동자본 이어 홍콩기업도 투자”<RFA>

-- 12월 11일 연합뉴스

16년만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해외 투자사와 대북 지원단체, 대북사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북한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평양 보통강구역에 105층짜리 피라미드형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으나 1992년 외부 골조 등 60% 공정을 보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집트 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의 1억달러 투자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영부동산 개발회사인 ‘에마르’가 북한의 광산개발권을 대가로 이 호텔 공사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도 류경호텔 건축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고 RFA는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홍콩의 유명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가 류경호텔의 재건축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기업체의 대북 진출을 위한 교두보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라스콤, 에마르, 홍콩 기업이 잇따라 류경호텔 건축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켜, 류경호텔이 북한 진출을 위한 외국 기업들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전문가 134명 ‘대북정책 전면적 전환 촉구’ 호소문 발표

-- 12월 11일 통일뉴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134명이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11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남북관계가) 최근 군사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차원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현 정부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12.1조치’에 대해 “유감스런 행위”라면서도 ‘6.15, 10.4선언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외면’, ‘인권공세’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의 이러한 극단적 대립상황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당국자들의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발언들이 덧붙여지면서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의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경제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고위급회담 제안 △남북경협 정책지원 프로그램 제시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실천 △통일·외교라인 전면 쇄신 등을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남북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의료·산업분야 등 대북교류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6자회담 결렬, 부시에게는 좌절” <NYT>

-- 12월12일 연합뉴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합의 도출 실패가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일종의 좌절을 안긴 셈이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NYT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부시 대통

령의 임기 안에 다시 협상장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의 손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희망을 북한이 빼앗아버렸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물론 미국측 추산으로 핵폭탄 8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축적했으며, 지난해 2월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10월 미국은 협상 진척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6자회담에서 북핵 검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구두 약속만 받은 상태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의 유인책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북한이 우리를 속였음을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뇌졸중을 앓은 뒤 북한 지도부에서 일종의 권력 공백 상태가 빚어졌으며, 그로 인해 북측 협상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국무부는 중유 제공 같은 대북 원조 조치들 중 일부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백악관 “對北전략 재고할 필요 있어”

-- 12월 12일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1일 핵검증체제 구축을 위한 베이징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북한에 대한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협상결렬을 문제 삼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북한)이 우리와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서화하려고 하지 않아 회담이 후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밝힌 ‘행동 대 행동’에 대해 뭔가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검토되는 대북전략 재고방안들에 대해 페리노 대변인은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지원”이라고 언급해 대북 중유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면서 “힐 차관보가 돌아오면 빠른 시일내 주요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 5개국이 검증의정서에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은 열려 있는 문으로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기회가 있었다면서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회기(8~10일)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합의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북핵 검증 과제가 1개월여 남은 부시 행정부가 아닌 오바마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결국 미국 차기 정부로 넘겨진 북핵회담

-- 12월 12일 뉴시스

북핵 검증 작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오던 대북 정책은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차기 정부의 숙제거리로 넘겨졌다.

북한은 그동안 질질 끌어온 북핵 검증 과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지칭되는 시료 채취를 거부, 검증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 남겨진 시간으로 봐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제2 단계 검증 과정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 정부로 넘겨지게 됐으며, 새로운 판을 짜든 혹은 이전 단계를 계속하든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됐다.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북핵 협상은 미 국무부의 언급대로라면 현재로서는 ‘완전 중단’이다.

현 시점까지 이어져온 협상의 내용이 전부 사라져버려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더 이상 지금에서 진전될 가능성은 당분간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없어 보인다.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핵검증에서 시료채취 없이는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만큼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2단계 검증 작업은 미완성이며,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2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격 인정한 이래 다음해인 2006년 5월 동해상을 향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높이면서 그해 10월 핵실험을 이행한 뒤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으면서 이어온 북핵 회담은 부시 행정부로서는 사실상 미완성으로 마친 셈이다.

그렇더라도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회담이 전혀 무의미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로서는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 실패라든지 혹은 끝났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이번 6자회담장에서 그동안 구두로 약속했고, 모든 회담 당사국들이 이해해 정작 문서화하려는 단계에서 발을 빼 서명하지 않으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이 드러났다.

북한이 이어져온 회담의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차기 정부를 의식, 이 같은 회담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이며, 앞으로 차기 정부와 대면을 통해 ‘언을 것’을 더 협상해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재지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엿보이는 의도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는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것은 요건을 충족했고, 뒤로 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언급, 명단에 다시 등재하겠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미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할 단계이니 이쯤에서 현 정부에서 이뤄지던 협상 과정을 중단하자”고 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미국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한계를 받아들인 셈이다.

北, 유엔기구에 소액대출사업 재개 요청

-- 12월 12일 연합뉴스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지난 19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북한의 협동농장 주민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0년 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사업평가를 위해 지난주 방북한 IFAD의 북한담당자 가네쉬 다파씨는 “12년동안 북한의 9만 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미화 50달러 미만의 소액대출을 지원해왔다”며 소액대출을 받은 협동농장을 가구들은 대출금으로 돼지나 씨감자를 구입해 “예전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파씨는 IFAD가 북한에서 소액대출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 대북 사업전략을 준비해 2010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액대출 사업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모하메드 유누스 교수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빈곤퇴치 제도로 확대 발전됐다.

IFAD의 대북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 은행이 자체 자금을 더해 군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들에게 대출해주고, 이 돈을 받은 농장과 주민들은 가축이나 영농기구를 마련해 농업생산을 향상시킨 후 잉여 가축이나 식량을 팔아 지방은행에 갚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IFAD는 지난 12년간 북한의 잠업개발 사업(1996~2002), 축산복구지원 사업(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 사업(2001~2008) 등을 위해 모두 6천910만달러(약 933억원)를 10년 거치, 40년 상환에 수수료 0.75%의 조건으로 빌려줬다.

美 경제난에도 대북지원은 전략적 차원에서 지속

-- 12월 13일 헤럴드경제

미국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국제개발연구소 스티브 라멧렛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원조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경제 위기로 개발도상국들에 주는 국제 원조를 삭감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선 ‘전략적 관계’를 고려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라멧렛 연구원은 “세계 경제 위기가 분명히 미국의 해외원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미국이 해외원조를 삭감할 때 자국과 전략적 관계에 놓여 있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이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그는 북한과 같이 미국과 ‘전략적 관계’에 있는 나라로 이라크, 파키스탄 등을 꼽았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헨리에타 포어 처장도 지난 9월말 뉴욕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협상과 별개로 대북 식량 원조를 계속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다른 세미나에선 식량 원조의 지속 여부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량을 받을 국가들의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RFA는 덧붙였다.

“北교향악단, 미국 답방공연 추진” <WP>

-- 12월 13일 연합뉴스

북핵검증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실패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지만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 공연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북미 양측간 문화교류를 통한 긴장완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과의 문화적 교류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북한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경색된 북미관계의 돌파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WP는 지난 2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 방문공연을 열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북한 관계자들과 미국의 음악계 주요인사들 사이에 진행중인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은 비공식적 문화외교를 통한 양측간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필을 이끌고 2월 평양공연을 다녀온 자린 메타 뉴욕필 사장은 북한의 음악계 주요인사들이 미국 공연 여부를 타진해왔다고 밝히고,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현재 북한의 유엔대표부, 미 국무부, 뉴욕필 등을 상대로 내년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160명의 북한교향악단이 미국 청중앞에서 연주회를 갖는 방안을 중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 “3국은 동반자…전방위 협력” (종합)

-- 12월 13일 노컷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본 아소 타로(麻生太郎) 총리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간 동반자 관계 구축과 함께 세계 금융위기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전방위 협력에 합의했다.

한중일 정상은 3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 및 금융상황과 관련한 심각한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자”고 밝혔다.

또한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를 평가하면서 세계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공동대처하기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적극 이행, 아시아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또,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12개월간 신규 무역장벽 도입 및 수출제한 조치 자제,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배치되는 무역축진 조치 자제 등을 결의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개도국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와 관련해 최근 베이징

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이 검증체제 수립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美, 북 ‘핵무기 국가’ 표기…동북아 안보 재편되나

-- 12월 14일 노컷뉴스

미국 정부기관이 잇따라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국가정보위는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에서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도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대륙 연안의 5개의 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거론했다. 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로 줄곧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주기를 촉구해왔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 특별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핵 보유국 클럽(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NPT 체제하에서 인정되지는 않는 국가들을 말한다.

미국 국방부와 국가정보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기술한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NPT 체제하에서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실험을 한 국가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 등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 역시 지난 11일 “핵보유국은 NPT체제 출범 당시의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북한은 영원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는 점차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이 '비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추세지만 북한이 공인된 핵 보유국으로 대접받을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기관이 보고서에서 잇따라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기술하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Orascom to Invest in North Korean Phone Venture 오라콤이 북한 휴대전화 벤처에 투자하다

-- 12월 10일 Bloomberg

출처: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0&sid=aas2jKR.c4Yg&refer=asia>

Orascom Telecom Holding SAE of Egypt will offer mobile-phone services in North Korea starting next week, the first foreign telecommunications company to invest in the Stalinist state.

Orascom, the biggest mobile-phone company in the Middle East, rose 9.8 percent in Cairo after a spokeswoman who declined to be named disclosed the investment in a telephone interview today. The gain was Orascom's biggest in two months.

The Egyptian phone company, trying to offset a slowdown in Pakistan and Bangladesh, estimates it will spend \$400 million on a cellular license and investment over three years. Orascom joins OAO Russian Railways and Emerson Pacific Group among a handful of companies in North Korea. The reclusive nation's economy has been ravaged by famine and U.S. sanctions over its nuclear program.

"It's a new, untapped market," said Teymour El-Derini, a trader in Cairo at Beltone Securities Brokerage. "If you believe in North Korea, and that it will eventually open up, it's an excellent market for Orascom."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다음주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국 통신회사로서는 스탈린주의 국가에 대한 최초의 투자이다. 중동 최대의 휴대전화 회사인 오라스콤은 이 발표 이후 주가가 9.8% 올랐다.

오라스콤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의 경기 후퇴를 상쇄하고자 총 4억불을 3년여에 걸쳐 투자할 것이다. 오라스콤은 러시아철도공사, 에머슨 패시픽 그리고 북한의 일부 회사와 함께하고 있다

North Korea nuclear talks end with no deal 북핵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다

-- 12월 11일 Reuters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vcCandidateFeed2/idUST224002>

Multilateral talks on getting impoverished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rms programme in exchange for aid and better diplomatic standing ended on Thursday with no agreement. Analysts say they expect little movement until President George W. Bush leaves office in January and is

replaced by Barack Obama.

North Korea has been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ver its nuclear arms programme for about 15 years. It was in no rush to seal a deal before the Bush administration leaves office and it feels it will have the upper hand when a new, and perhaps inexperienced Obama team takes over in January. North Korea would have only moved if it could have won a major concession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such as a relatively unobtrusive verification deal limited to its well-known plutonium producing nuclear plant and a vague statement as to what inspectors can do on the ground. North Korea does not like to be ignored and may try to force Obama's hand by raising tension by test-firing missiles, or, in an extreme measure,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북핵 폐기와 북한 지원 및 외교적 지위 개선을 교환하고자 하는 다자 회담이 목요일 합의 없이 끝났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오바마 취임 전까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은 15년 이상 미국과 핵무장 관련 협상을 벌여 왔다. 북한은 부시 퇴임 전까지 서두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오바마 행정부가 1월에 들어서면 협상 시 심리적 우위에 설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北朝鮮への重油支援、露は完遂の方針

북한에 중유 지원, 러시아는 완수 방침

-- 12월 14일 読売新聞

출처 : <http://www.yomiuri.co.jp/feature/20080115-899562/news/20081214-OYT1T00087.htm>

ロシア通信によ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6か国協議でロシア首席代表を務めるアレクセイ・ボロダフキン外務次官は13日、北朝鮮への重油支援を完遂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ロシアは20万トンの支援を負擔し、5万トンずつに分けて北朝鮮に送っている。今月中に3回目の供給を完了する予定という。

ボロダフキン次官は「北朝鮮への制裁として支援を中断することにロシアは合意しておらず、5か国が重油供給を停止するとした米国の発表は驚きだ」と述べるとともに、協議参加国はそれぞれの義務を履行すべきだとの考えを強調した。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6자회담 진척관 상관없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한 것으로 러시아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20만 톤을 맡아 5만 톤씩 나누어 북한에 보내고 있으며, 이 달 안에 3번째의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로다브킨 차관은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5개국 중유 공급을 정지한다고 한 미국의 발표는 놀라운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의 참가국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추천 논문

유라시아시대 대륙 철도 연결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현재 러시아는 철도, 도로 등 육상교통망과 항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통망과 연결하고, 유라시아대륙의 중앙에 위치해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유럽과 아시아의 성장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원대한 ‘유라시아 물류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물류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운송로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극동지역의 교통체계는 동-서 국제운송로인 TSR과 BAM철도, 북극해로,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항만을 연계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아직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운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종합물류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러시아는 낙후된 교통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단일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복합체 전체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이러한 교통물류전략에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한-중-일 3국의 투자교역관계에 맞추어 사고했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지리적 공간을 현재의 ‘동북아’에서 ‘유라시아’ 전체로 확장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향후 대륙으로 향하는 육로가 열리지 않는 한 ‘해양과 대륙의 복합화 전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보다 조기에 대륙철도연결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혹은 남-북-러 삼자관계를 통해 한반도와 시베리아극동지역을 하나의 통합 물류권역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러 교통물류협력이 실행되는 지리적 공간 범주를 CIS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북방 항로를 활성화하고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및 항만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미개척지’인 러시아의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러시아와

의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환동해경제권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환동해경제권을 축으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은 물론이고 동해항 등 환동해권 여러 항만과 극동 항만간의 연계 항로를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글로벌 통합물류 허브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부두공단 등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항만 터미널 개발 및 물류시설 건설 등에 참여하여 러시아의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성장 추세에 따라 러시아 항만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는 내륙 운송망과 연계할 항만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석유, 가스, 석탄 및 광물자원 개발이 본격화되고, 이 지역의 대외교역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다.

또한 글로벌 통합물류 허브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컨테이너 부두공단 등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항만터미널 개발 및 물류시설 건설 등에 참여하여 러시아의 물류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물류경쟁력을 제고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나진-핫산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신 ‘부산-러시아극동-유럽’을 연결하는 새 물류망 개발을 제안했고, 러시아 극동항만 중 유력한 대안으로 ‘포시에트항’을 거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포시에트항을 한국의 전용 항만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륙철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동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의 대(對)북 영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글의 전문은 <http://www.krlove.net/> 커뮤니티-북한관련자료실의 공공기관연구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안 단신

북한, ‘미국 연례보고서에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발표’ 보도

○ 12.10. 중앙통신은 “미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무기보유국으로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근 발표된 미국방성 연례보고서는 아시아대륙에 이미 5개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 인디아, 파키스탄, 조선, 로씨야를 차례로 밝혔다”면서 “미국 정부보고서에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